

# 광주·전남 초선 7명 '국감 우수의원' 선정

### 이병훈·이형석·조오섭·윤재갑·김희재·서동용·김원이 "대안 제시형 정책 질의로 국정감사 수준 높여" 평가

큰 것 '한 방'이 없는 '부실·맹탕 국감'이었다는 전반적인 혹평 속에서도 광주·전남의 초선 국회의원 7명이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7명 모두 대안 제시형 정책질의로 국정감사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광주에서는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이 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이번 선정으로 3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이란 타이틀도 얻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2022년 국감에서 '윤석열차' 만평 사건으로 불거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검열 의혹, 청와대 개방·활용 과정에 드러난 특혜 의혹, 문화도시 지정 공모 과정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소외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 평가, 출결 사항 등의 내부 평가를 거쳐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올해 국감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매섭게 추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 국토위)도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담 민영화 ▲사회갈등 해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주거 지원 해결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5대 실천과제를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제기하며 10년 만에 예비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고, 광주역 국가혁신지구내 철도부지 매입 문제의 고리도 풀어냈다. 또 평택-오송 복복선 및 인천·수원발 KTX 노선 개통, 추가 수요를 반영한 광주충정역 추가 증축 규모 재논의를 이끌어내 지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전남에서는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전통주 특혜 부여 문제 ▲섬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안 여객선 정부 지원 확대 ▲농어촌 민박 지원 제도를 악용한 편법 지원 문제 등 농어업·농어촌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희재 의원(여수) 역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 운영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해 범부처 차원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도 민주당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0년, 2021년에 이은 3년 연속 선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서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발생 긴급 대책 마련 요구 ▲초·중·고 급식식품비 단가 인상 필요 ▲학교 외 공사장 통학로 점검 ▲코로나 이후 장기 미인정 결석 증가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후속 조치 ▲대학 조교 처우개선 등 국민안전과 민생현안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원이 의원(목포)은 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등 지방의 심각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과 지역인사제 등 지방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김진수기자

# 與野, 이틀 남은 예산협상 '평행선'

### 與 '법인세 인하'·野 '서민 감세' 절충안 찾으면 일괄 타결 가능성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조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받아며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감세안'이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서민 감세안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고전소설 '홍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고쳐주는 '놀부'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

에서 "민주당은 자신을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홍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협상에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조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받아며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오는 15일까지 법인세법 등에서 이견

을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수정안이 분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다.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단독 처리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으로서 당초 요구했던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 점에서도.

실제로 여야는 법인세 인하 등 부수법안 외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분회의까지 막판 밀고 당기기 끝에 협상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5일 전까지 결국 법인세와 예산 모두를 통틀어 한꺼번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정조사 촉구하는 유가족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스톤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野 "與 복귀 안하면 내일부터 국조 시작"

### "의사 표명 없으면 모든 권한 野 위임 이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제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반쪽' 국정조사가 될 우려가 커지자 '단독 강행' 엄포로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또 정부가 국정조사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조처는 예의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

도 제출조차 거부한다"며 "정부 기관이 테러 조직도 아닌데 조직도를 숨기는 게 운동장한가"라고 쓰아붙였다.

야 3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특위 임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조사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조사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이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해임건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 민형배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민형배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하위 유형으로만 다루는 현행 실태조사 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성폭력·그루밍범죄 등 신종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분석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기자



남자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제품

# New 씨알-렉스

남자한테~ 표현하기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활력을 느껴보세요!  
나를 위한 좋은 습관, 씨알-렉스

드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역시! 씨알-렉스!!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개월분(60포) : 198,000원 → 148,000원

주 문: yuhanbio@naver.com    네이버 카페 씨알렉스    검색

택배비: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유나는)

시·군 대리점모집

광주 본사 : 010-4624-5046  
전북지사 : 010-7704-2490